

통일부 장관, 한반도 정세의 대화국면 전환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5차 회의 개최(9.9.) -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월 9일(수)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4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현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기념사, 8.15 경축사,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 SNS, 최근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격려사 등 2026년 한 해에만 ‘평화체제’를 6번 언급했다고 밝히며, ‘평화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 자산이며,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정부 정책 방향임을 강조했다.
 - 아울러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 변화가 ‘불씨’로 끝나지 않고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또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통일정책실장은 2026년 하반기 한반도 평화공존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이 평화공존 정책이 구현하고자 하는 한반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전’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 자문단은 통일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평화공존 정책이 대한민국 정부 정책으로서 정부 각 부처가 한 목소리를 내도록 만들고, 이를 국민, 북한, 관련국에 일관되게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평화체제 이행 전략에 대한 논의 준비, 북미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노력 강화,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준비, 평화 체제에 대한 인식 확산 활동 등을 제언했다.

□ 통일부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일관되게 이행하여 포용적·안정적·책임있는 평화공존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한반도평화경청단 평화공존담당관실	책임자	담당관	이혜옥 (02-2100-5451)
		담당자	사무관	윤현주 (02-2100-5452)

